

尹, 인니·인도 세일즈 외교… “수출 마이너스 종지부 모멘텀”

내일부터 아세안·G20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 5박7일 일정 출국
정의선 등 기업CEO 40여명 동행
원전·방산 등 유망 수출산업 홍보
다수 양자회담 통해 경제외교 주력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10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에 나서기 위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전 손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11일 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역내 한국의 역할 및 위상 강화라는 외교적 성과와 함께 세일즈 외교에도 박차를 가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인니)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모두 올해로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협력국이다.

더욱이 인니는 아세안 회원국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인도는 인구수를 비롯해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로 꼽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양국 순방을 통해 세일즈 외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서는 별도의 공식 경제사절단을 구성하지는 않았다. 다만,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을 위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양국 주요 기업 CEO 40여명이 동행한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순방의 경제 분야 키워드로 ▲수출시장 확대 ▲첨단산업공급망 다변화 ▲디지털 리더십 강화를 꼽았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와 주요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작년 11월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자회의이지만 다수의 양자회담과 별도 경제행사 등을 통해 경제외교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수출시장 확대와 관련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주요한 시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 활동을 통해 작년 10월 이후 계속돼온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는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아세안·G20 정상회의 계기에 다수의 양자회담을 통해 원전·방산·인프라 등 우리 유망 수출산업을 적극 홍보하고, 국가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이행 상황을 점검과 우리 기업들의 진출 애로사항도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또, 아세안 국가와 인도는 니켈 등 핵심 광물이 풍부해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전략적 국가인 만큼 첨단산업 공급망 다변화에도 공을 들인다.

최 수석은 “우리와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이 긴밀히 연계돼 있는 인니·필리핀 등과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세안 7개국과 인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의 공급망 공조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디지털리더십 강화를 위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계획을 발표한다. 아세안은 디지털 경제 진입에는 늦었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빠른 편이다.

아울러 이번 윤 대통령의 인니 순방에서 6일(현지시간) 한-아세안 디지털 기업과 청년들이 모이는 ‘한-아세안 인공지능(AI) 유스 페스타’에 참석해 미래 세대들의 교류를 지원하고 도전을 격려한다. 이어 7일 열리는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그동안 인니와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공급망 강화, 글로벌 아젠다 대응, 미래세대 교류 등 새로운 50년을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최 수석은 전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10일 인도 진출기업 오찬 간담회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한-인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지난달 인구 1.1만명 줄어… 올 감소폭 최대

행안부, 8월 출생아 1만9697명 그쳐
시·도별 경남 -3052명, 경북-2442명



지난달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뉴스1

지난달 우리나라 인구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증감에 의한 인구 자연감소분 또한 지난 8개월 중 최대폭을 기록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1만9697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 수는 3만802명으로, 인구 자연감소분이 1만1105명에 달했다. 지난해 12월(1만4006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자연감소는 올해 1월(-1만789명)에 1만 명을 웃돌았으나 4월(-7306명)과 7월(-7341명) 등으로 폭이 작아진 바 있다. 이후 8월에 다시 출생·사망 간극이 커진 것이다.

지난달 출생아 수(1만9697명)는 5년 전인 2018년 8월(2만8568명)에 비해 31.1% 감소했다. 5년 전만 해도 출생아 수는 사망자 수(2만5008명)보다 많았다. 또 10년 전(3만6119명)·15년 전(3만6235명)과 비교해 각각 45% 이상 줄었다.

7776명)으로 소폭 늘었다가 7월(-5612명)에는 올 들어 가장 완만한 내림세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8월에 다시 1만 명 가까운 인구가 줄었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별로 경남(-3052명)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 경북(-2442명), 부산(-2312명), 서울(-1794명), 전남(-1732명) 순이다.

특히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세종도 지난달에는 239명 감소했다. 거주민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세종은 지난 2020년 6월에 기록한 일시적 감소(-32명)를 제외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서울 등 8개 주요 시 중에는 인천(+3599명)을 제외하고 7개 시에서 모두 감소했다. 9개 도에서는 경기와 충남·충북을 제외한 6개 도가 인구 내림세를 보였다.

서울(940만9466명)과 부산(330만2740명) 인구는 각각 940만과 330만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 제 1, 2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인구는 국내 전체인구의 감소가 시작(2019년 12월)되기 한참 전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獨 제조업, 中에 의존하고 고령화 심화 부진한 경제, 우리와 비슷… 대비해야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고속려자 활용 생산성 제고하고
산업 다변화로 잠재력 확충해야”



/뉴스1

“독일 사회 전체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했다. 우리 앞에 변화가 닥쳤는데, 모두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겪는 문제는 그간 누적된 결과다.”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화학기업 바스프(BASF)의 마틴 브루더뮐러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올해 2분기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0.0%. 20년 전 세계최강의 제조 경쟁력과 노동개혁의 성과로 선진국 중 최고인 2.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문제는 독일의 이 같은 문제점이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배어 있다는 점이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국제경제리뷰 최근 독일경제 부진배경과 시사점’에 따르면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의존하던 가스 및 석유수입을 줄이면서 화학, 금속 등 에너지 집약 산업생산이 크게 위축됐다.

◆독일, 제조업·고령화 비중 높아
여기에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도 한몫했다.

UN산업개발기구에 따르면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는 1위 독일, 2위 중국, 3위 아일랜드, 4위 한국 등이다. 2000년대 독일의 제조업 비중은 20% 수준으로 1970년대 30% 수준에서 10% 포인트 안팎 떨어졌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기계장비, 고급소비재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 수요가 둔화되고, 미·중무역 갈등에 따른 불확실

성이 확대되며 산업재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성과는 자동차, 전자기계 등 기존산업에 집중돼 있다”며 “디지털 경쟁력 또한 전통적 제조업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령자·저숙련 노동자 비중이 커지는 노동시장도 문제다.

앞서 독일은 2000년대 중반부터 동유럽 및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형태를 다변화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지만, 고령층이 은퇴세대로 변하면서 노동력 부족문제는 더욱 커졌다. 은퇴연령에 도달한 독일인 수는 2023년 1600만명에서 2030년 최소 200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韓, 중국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다변화해야

문제는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021년 기준 27%로 1991년 27.6%와 다를 바 없다. 영국이 1991년 16.3%에서 2019년 8.7%로 낮아지고, 일본이 1994년 23.5%에서 2018년 20.7%로 낮아진 것과 다른 모습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포스코, 창사이래 첫 파업 가능성 커져

》1면 ‘韓경제 빨간불인데’서 계속

현대차 노조는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현 정년으로는 3년간의 소득 공백이 우려된다”며 정년 64세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사안을 기업이 먼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자동차 등 나머지 회사에서도 임단협이 진행 중이지

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한국지엠은 성과급과 함께 국내 전기차 생산설비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코도 창립 55년만에 처음으로 노사의 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 창사이래 첫 파업 가능성도 커졌다. 노조 측은 앞서 임단협 회의에서 사측이 13.1%의 기본급 인상과 포스코홀딩스 주식(1인당 100주),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1세로 연

장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포스코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이른 시일 내 정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침체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온 기업들이 노조 파업으로 생산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브랜드 신뢰도는 하락할 것”이라며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계에 남아 있는 경제 회복 기대감도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